

【 종합 】

“박람회장에 남북 공동전시관 필요”

산연업 김도훈 박사 ‘여수박람회 유치 전략 심포지엄’ 제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전략 일환으로 오는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한 공동전시관을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는 지난달 31일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한반도 정치적 특수성을 살려 평화와 화해의 축전으로 승화시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는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남한이 공동 전시

관 건립 문제를 북한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박사는 “정부·전남도·여수시가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해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의 경우 2010 박람회 유치 실패 당시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요청 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등이 순방외교 활동을 펼칠 때 또는 상대국 고위인사가 한 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역할과 관련해 김 박사는 “고흥 우주개발기지 등 여수 주변지역의 개발 계획을 홍보하고, 전남지역 축제를 박람회 개최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광주·경남·제주 등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고 남도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진지한 영어 책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역할과 관련해 김 박사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여수시의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제 세미나를 여수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모로코 만만치 않다”

주승용 의원 “2차투표 전략 세우야”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전남 여수읍) 의원은 지난달 31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한국의 경쟁국인 모로코가 만만치 않다”며 “절대 (여수 유치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지난달 22~30일 스위스와 독일, 루마니아를 방문한 주 의원은 이날 여수시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로코가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늘리는 등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유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에 방문한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 지지를 선언했다”며 “1차에서 폴란드가 떨어질 경우 2차 투표에서 한국을 지지해 달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시 설

국회, 지역현안 처리 더 이상 미루지 말라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서남권(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과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특별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건교위와 문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정기국회에 올라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선정국과 국정감사가 맞물려 있는데다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남권 특별법의 경우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 상정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남 서남권만 남겨두고 있느냐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F1 특별법 역시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9

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들 두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참여정부 임기 내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팽팽한 정치입장으로 자칫 차기 정부로 밀려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 추진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남권 및 F1 특별법은 전남 서남권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파나 지역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미래를 좌우할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단체 상품권 활성화 지역주민 몫이다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선 시·군·구 지역상품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하듯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상품권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수도룩하다. 영암군과 나주시, 여수시, 담양군, 곡성군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 등을 내세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애용함에 기대어 지역상품 구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상품권을 스스로 구입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 군청을 비롯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발적 수요증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상품권 사용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고 가맹점과 판매처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도 없어 특별히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역상품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지방의 상품권은 대형 마트의 잇단 진출과 시장 잠식 등으로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 상인들은 갈수록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활로는 스스로의 인식전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바가지와 불친절 등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펴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고가의 상품을 사주려는 주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운재 前비서관 의혹 檢, 재수사 착수키로

정운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 H토건 대표 김모(41)씨와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는 없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31일 정 전 비서관과 김씨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보완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검찰은 김씨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기소한 이후 김씨가 황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소비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보완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 검사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으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즉시 수사할만한 사안이 없다”면서 “보완수사에서 단서가 포착되면 그것은 수사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기항한 이순신함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에 입항한 최첨단 한국형 구축함 추무공 이순신함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피랍사태 해결...국정원 활약 관심

현지 협상 주도 ‘선글라스맨’ 국정원 요원인 듯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난 달 28일 대면 접촉에서 인질 전원 석방에 합의한 사실을 발표할 때 사진으로 공개된 한국 협상대표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국정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 협상대표가 국정원 소속인 지와 이번 협상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 확인은 거부하고 있으나 사태 초기부터 막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부터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이비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그동안 외국 정보기관들과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선글라스맨’은 영어뿐만 아니라 아프간 현지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국정원 직원임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특히 사태 초기부터 아프간 현지에서 직원들을 파견, 여러가지로 신분을 숨긴 채 각종 라인을 통해 탈레반 측과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업무 성격상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탈레반과 4차례 대면접촉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말리아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에도 국정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질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미뤘다.

가짜 학위·자격증 대대적 단속

정부, 위조 등 ‘신뢰 저해’ 행위도

정부는 신정아 전 동국대학교수의 허위학력 파문과 같은 가짜 학위와 자격증 등 신뢰저해행위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장태평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 금감위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패현안 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우리사회의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청렴위가 발표했다.

이들위에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석박사 학위위조, 의료·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위조, 규격·품질인증 위조 등 신뢰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

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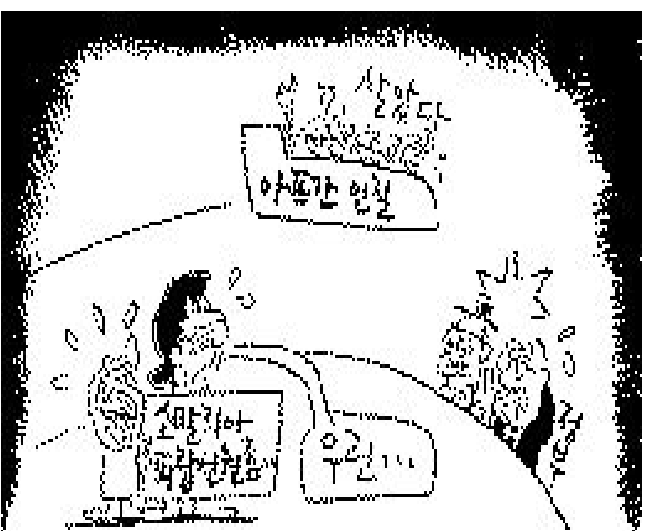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법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주식거래 시장경보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처리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방 대선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출마기와 선거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공무원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패취약시기인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청렴위를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행동강령 실효점검반’을 가동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등을 단속하고,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청, 국제청, 금감위, 공정위 등은 피조사업체 부담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빛日만평

- 김중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요?!

‘산행도 반쪽’ 멀어지는 李-朴

이명박 지리산서 ‘대선 파이팅’... 박측 대거 불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화합 워크숍’이 틀째 인 지난달 31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내·외 당협위원장(옛 지구당 위원장) 40여 명과 지리산을 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10분경 등산 출발지점인 성삼재 주차장에 도착, 일행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뒤 곧바로 2시간여의 노고단 코스를 오르기 시작했다.

베이직색 바지와 겨자색 티셔츠, 반색조끼에다 베이직색 등산모를 착용한 이 후보는 등산 시작 30여분 후 대선일(12월19일)을 뜻하는 해발 1천219m 지점에 도착, 일행들과 승리의 파이팅을 3번 외쳤다. 1219 지점은 일행 중 일부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정확히 짚어냈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는 산행 도중 또 ‘박근혜 전 대표를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맑은 연산에서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 되나. 정치는 여의도에서 해야지...”라

며 죽음을 피했고, 최측근 이재오 최고위원의 ‘2선 후퇴’ 필요성에 대해선 “질문이 유치하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날 산행에는 친박(親朴·친 박근혜) 성향의 의원들이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전날 연찬회와 마찬가지로 화합 차원에서 ‘반쪽 산행’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이 대거 불참함으로써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도 박 전 대표측의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다.

특히 연찬회에 불참한 친박 의원들 가운데는 ‘친박계’를 리드할 인물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 대부분은 경선 패배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행사를 보이콧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보태고 있다.

민주 ‘몹짐 불리기’ 본격화

어제 광주서 1만여명 입당식

광주·전남에서 맹주 자리를 놓고 대통합 민주신당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몹짐 불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1일 시장 회의실에서 최인기 원내대표와 김민석 대선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만 당원 입당식을 가졌다. 광주시당은 이날 입당식에 광산구에서 8천200명, 남구 1천250명, 서구 1천여명 등 모두 1만 400여 명이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치범 환경장관 전격 사퇴

민주신당 이혜찬 캠프 합류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이혜찬 대선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최근 다수의 참여정부 인사들이 친노주자 캠프에 합류했지만 현재 장관이 사임하고 대선 후보 캠프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 캠프의 김현 공보실장은 “이 장관이 캠프 합류를 위해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캠프에서 이 장관의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